

# 인터넷 이용 강력범죄 대책마련 시급

### 익명성 보장 인터넷상 범죄 음모·강력사건으로 이어져 유해사이트 관리·네티즌 인식 개선·처벌 강화 등 필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각종 커뮤니티·카페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잇따라 강력 범죄를 공모·실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 범죄가 날로 조직·지능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규제가 미흡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 광주 북부경찰서는 영아를 인질로 붙잡고 흥기를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4)·조모(30)·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가정집에 침입해 흥기로 생후 16개월 된 남아와 어머니 A씨를 위협, 귀금속 6점(300만 원 상당)과 15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속칭 '한탕' 또는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한다'는 주제·형식의 인터넷 카페에 '돈만 되면 뭐든 하겠다'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국에 서버를 둔 채팅 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치밀하게 범행 방법·역할을 논의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일 광주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기까지 온라인상 아이디만 교환했고, 범행 전후 일일 통화로 하지 않거나 아이디를 변경하며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지난 3월15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절도를 계획한 30~40대 3명이 합평군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에 침입해 80여원대 황금박쥐 동상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엔 음란사이트·각종 커뮤니티에서 성범죄와 강도를 공모한 20~30대 남성들이 광주 서구·남구에서 여성을 성폭행·납치하거나 금품을 빼앗아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6월에는 인터넷으로 차탈이를 공모한 일당 2명이 지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8개 시·도 고급아파트를 다니며 차량을 털다 경찰에 필미를 잡혔다.

2007년엔 '강도들(강도들의 모임)'란 인터넷 카페에서 공범을 모집, 전남 지역에서 범행한 남성들이 붙잡혔고 최근까지 인터넷 범죄 카페·채팅 앱을 통한 강·절도 행각과 유튜버를 이용한 마약 거래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익명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 또는 채팅 앱이 범죄자를 모으고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예방·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실제 익명성·명의 도용과 많은 커뮤니티에 따라 범죄 공모를 일일이 찾기 어렵는데,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커뮤니티 운영자들의 자체 정화 노력과 네티즌의 자발적인 의지(신고·고발 등)가 요구되고,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영아 인질 강도 범행의 경우 온라인상 익명성을 토대로 책임을 분산하고, 과감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서로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해 여러 명이 범행하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사이트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강도와 유형은 같지만, 익명성 보장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가중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 여수 해안가 바지락 껍데기 투기 의혹

여수시 돌산대교 인근 해안가에 수년간 바지락 껍데기 부스러기가 대량으로 쌓여 있어 불법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돌산대교 인근 대교동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폐각류 껍질이 바다에 버려지면서 100~200m 길이의 모래밭과 몽돌밭이 조개 껍질로 뒤덮여 있는 실정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조개껍데기가 쌓이기 전 몽돌밭에서 물이 빠지면 낙지를 잡는 등 어업 활동이 가능했으나 조개껍데기가 해안가를 잠식한 후에는 어업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여름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10여 년 전부터 해안가의 소규모 폐각류 가공 업체에서 바지락 알맹이를 가공한 후 남은 껍데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버린 껍데기가 조

류에 밀리면서 해안가에 쌓이게 된 것 같다"면서 "바닷속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양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해안가 인근에는 영세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여러 곳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 패류 껍데기를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버리거나 해안가에 직접 쌓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수산물 가공업체 관계자는 "바지락 껍데기를 소량 버린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껍질 자체가 불법 폐기물 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쇄된 조개껍데기의 바다 투기에 관련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껍질이 쌓여 있는 제보가 있는 만큼 현장을 방문해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이런 판결 저런 판결

### 법원 "직장동료 장례 돕다 지병 악화...업무상재해"

"기존 질병이 과로로 악화...병 유발해"

단기간 업무상 과로 등으로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말 사흘간 회사 동료 직원의 가족 조사(弔死) 관련 장례식 지원을 해주는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A씨는 그 다음날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급성질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 "A씨의 발병 전 1주간 업무가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업무량과 시간이 증가했다"면서도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상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기존 질병 등이 조사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이 사건 병을 유발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66시간48분으로, 발병 전 12주 전체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38시간14분과 비교하더라도 업무시간 증가량이 30%를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병 3일 전부터 그 전날까지 평소 하지 않던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면시간 부족과 장례 지원 업무 자체의 과중함 등으로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농어촌공사, 한두레 농산 고발하기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일 한두레농산(주)을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촌공사의 한두레농산 형사고발은 한두레농산 설립 시 농어촌공사의 소유 저수지를 매입하고 일대의 토지를 10년(2019년)간 임대 사용 후 토지의 지분율(농어촌 72%·한두레 28%)로 한두레농산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을 가동하기로, 가동기 10년(2029년) 후 농어촌공사에 건물을 전체 기부하는 조건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가동기 도래일을 1년여 앞 둔 지난해 한두레농산은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명의 이전하고 해당 건물에 특수관계 건설 회사를 동원해 부동산가압류와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불법을 저질러 농어촌공사가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서은홍 기자




해바라기 꽃 '만개' 8일 오후 해남군 마산면 간척지에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농장에 관광객들이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무직 퇴직금제 개선·차별 철폐해야...성실교섭 촉구"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은 8일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은 성실한 교섭에 나서 공무직 노동자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부터 무려 217차례에 걸친 교섭이 각 구청의 말 바꾸기와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결렬돼 지난 1일부터 5개 구청이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로·하수·공원·복지·보건·복지 등 분야에서 시민 생

활에 불편이 없도록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일한 각 구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인사·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차별받고 있다"며 "모성보호·병가 제도 등에서의 차별은 직장 내 복지 서열이 존재하며, 차별적 복지로 공무직 직종 간에도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의 굴레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삶에서 벗어나려는 공무직 노동자를 복수를 건 단식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부당 노동쟁위로 규정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구청장들의 구태의연한 태도가 노동자들을 총파

업으로 내 몬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노동조합은 세계수령권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2차례 긴급 교섭을 받았지만 노조가 대폭 양보한 안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역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수령권대회의 성공 개회를 위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용섭 시장과 각 구청장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집중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무책임한 교섭 행태를 벗어나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각칼, 자활치료, 응급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부터 준비하시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